

기무사, 군 면회만 가도 개인정보 털어

군 인권센터 폭로... "민간인 주소 등 무단 열람 중국 여행기록 있으면 '적성국가 방문' 딱지 노무현 전 대통령 - 국방장관 통화 엿들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열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기무사가 면회차 군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일반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센터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간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내부 제보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망 회선 활용해 민간인 개인정보 무단열람" 센터는 기무사가 일반인이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위병소에서 방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

무사가 다 모아 사찰했다"며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 군병원에 위문을 온 정치인 등을 기무사가 모두 사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차 주관하에 위병소에서 확보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해 대공 수사 부서인 5차에 넘긴다"며 "5차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등 특이 사항이 있는 방문자는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랐다.

센터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자' 등을 명목으로 갖다 붙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이후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갖가지 사찰을 자행했다. 관찰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통화 내용도 엿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까지 기무사의 도·감청 대상이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센터는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개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의 도·감청은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행해진다. 기무사는 또 팩스와 이메일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도·감청은 작업은 주로 210기무부대가 담당하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확보된 도·감청 내용 중 일부가 상부에 보고된다. /뉴스

센터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활비 200억 사용처 '60단위 기무부대', 민간 첩보 수집 기무사 특활비 200억원의 주 사용처로 꼽히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지역 유지 등을 접대하며 민간 관련 첩보를 모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는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 제공, 선물 공세 등의 향응 접대를 벌여 매수한 뒤 소위 프라치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기무사는 각종 집회 현장은 물론 서울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문화행사에도 요원을 파견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은 내란 등과 관련한 첩보만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가진 정책 영역은 민간 영역으로 이관시키고 보안업무도 각급 부대 보안부서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전북 당면 현안 적극 챙길 터"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30일 "전북의 당면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전북지역은 제조업 위기다"며 "전북 미래를 이끌 실질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및 투자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전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메가 탄소밸리 조성 등으로 탄소산업 중심도시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생물과 종자식품으로 이어진 농식품생명 산업 수도 전북을 만들고 SOC조기 구축으로 새만금 3.0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심을 잃지않고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 위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예측가능한 공정한 시스템 공헌 확립 ▲시민참여 정책플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을 방문한 남인순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랫폼 구축 및 당원자치회 활성화 ▲사회적 대화기구 민생연석회의 구성운영 ▲당 차원 평화와 번영위원회 운영 ▲여성공천 30% 의무화 이행 등도 약속했다. /뉴스

정부, 호우·태풍피해 복구비 370억 확정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복구 비용 총 370억원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90억원, 하천과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280억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70억원, 전북 36억원, 충남 16억원, 경북 17억원, 경남 16억원,

기타 7개 시·도 15억원이다.

특히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지역의 경우 지방비 부담 분 93억원 중 22억원을 국비로 전환, 추가 지원하게 됐다. 보성군 복구비는 총 206억원이다. 국비 120억원, 지방비 71억원, 자체 복구 15억원이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자치분권위, 19부처 518개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이다. 19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입법예고(행정안전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연내 제정 완료 목표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시행에 1년 유예기간을 둔다.

부처별로 해양수산부(119개)와 국토부(92개),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 고용부(34개), 산림청(24개) 순으로 이양되는 소관 사무가 많다.

이양되는 사무의 유형은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순이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 섬문화 관광 활성화 머리 맞댔다 | 도, 선유8경 국제관광서포터즈 포럼

관광자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색

전북도는 '선유8경 국제 관광서포터즈 포럼'을 지난 27일부터 29일 2박3일 동안 군산시의 부안군 일원에서 44개국 250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선유8경 국제 관광서포터즈 포럼'은 전라북도 섬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전문가와 국제청년이 한곳에 모여 전라북도 관광자원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포럼은 크게 1부 섬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2부 도내 관광지 체험부터 관련콘텐츠 제작, SNS를 활용한 마케팅 등 전북의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첫날 포럼에 참석한 최정호 전라북도 정부부지사는 "250여명 국제관광서포터즈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전라북도 관광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전북도는 '선유8경 국제 관광서포터즈 포럼'을 지난 27일부터 29일 2박3일 동안 군산시의 부안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이어 이재신(전라북도 관광총괄과 관광마케팅)팀장의 전라북도 역사와 주요관광지 그리고 새만금이야기로 기초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강동현(경기관광공사 마이스뷰로) 단장은 '콘텐츠가 답이다'라는 주제 강연에서 마케팅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도청 관계자와 학계(전주대 류인평교수 외 4인)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직접 청년서포터즈들과 함께 '선유도와 새만

금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북 관광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또한 전북트레블마트와 동시 연계, 1부행사 이후 250명 국제관광서포터즈는 2018 전북 트레블마트 행사를 방문해 시군관계자, 국내외 메이저급 여행사 및 포럼단 등이 참여하는 즉석 SNS 홍보를 받았다. 다음날 서포터즈단은 군산 근대

역사거리, 월명공원과 선유도를, 28일 저녁에는 부안 변산해수욕장을 방문, 마지막날인 29일에는 군산 행사장에서 SNS홍보마케팅 교육 후 부안 청자박물관 견학과 도자기 빚기, 내소사 사찰견학, 다도체험,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하여 서해안 지역관광, 문화체험부터 홍보전략 구성을 아우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김보미 학생은 단순 관광지 방문행사가 아닌 포럼에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시간도 의미 있었고, 도자기 빚기와 다도 체험 등은 친구들과 다시 와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명용 도 관광총괄과장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250여명의 서포터즈들은 이후에도 전북도 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턴제의 급진적인 발전에 맞춰 전북도 관광홍보방향도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